

8/ 한국의 일본 정치 연구사

‘이중과제’의 인식과 극복의 여정*

남기정



남기정(南基正)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에서 ‘한국 전쟁과 일본’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호호쿠대학 법학연구과 교수,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등을 거쳐 2009년부터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은 일본의 정치와 외교로, 전후 일본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맥락에서 추적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주로 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베트남전쟁 시기에 초점을 맞춰, 일본 정부의 대응과 시민사회에서 전개된 평화 운동의 재편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최근의 저작으로 『전후 일본의 생활 평화주의』(편저, 박문사, 2014),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 원류와 전개, 그리고 현재」(2014)가 있다.

*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인문한국(HK)사업의 지원을 받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가 수행하는 HK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과제번호 KRF-2008-361-B00006).

1. 서론

한국의 일본 연구환경은 일본 관련 학과의 양적 증가로 확인되듯, 과거 20년간 눈에 띄게 발전했다. 2010년 현재 한국의 179개 4년제 대학 중 105개 대학에 일본 관련 학과가 있고, 2만 570명의 학생이 재적하고 있다.¹ 특기할 만한 것은 2012년 서울대학교 학부에 일본 관련 전공과정인 인문대학 아시아언어문명학부가 신설된 것이다. 대학연구소나 학회의 성장도 놀랍다. 정기적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며 전문적 학술지를 발행하는 일본 관련 대학 연구소가 10개로, 그 중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와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등 2개 대학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대형 프로젝트인 인문한국(Humanities Korea)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게다가 1973년에 한국일본학회가, 1978년에 현대일본학회가 창설된 이후,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를 발행하는 일본 관련 학회가 20개나 된다. 대학에서 일본 관련 학과와 연구소가 늘고 제도화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일본관련 연구자가 제도권 연구기관에 안착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20여 년의 양적 성장의 양상은 일본 관련 박사 학위 수여자 수와 연구자 수의 급증에서도 확인된다. 국회도서관 검색을 통해 필자가 조사한 바(최종 검색일, 2015년 1월 20일)로는 해방 후 2014년까지 국내에서 일본 정치 분야로 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연구자가 66명인데, 이 가운데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동안 배출된 학위 수여자는 45명으로 70%에 육박한다.² 일본 관련 단행본 발간 또한 전체 1만 3367건 가운데 1995년 이후 발간된 단행본 수가 9904건으로 전체의 74%에 이른다. 일본 관련 논문 수는 전체 6만 9399건에 달한 가운데, 1995년 이후 발표된 논문이 4만 7373건으로 이 또한 68%에 이른다. 이렇게 보면, 해방 이후 70년 동안 일본 연구의 70%는

1 趙寛子, 「1990年代以降の韓国の日本研究—制度と視線の変化」, 郭南燕 編, 『世界の日本研究—日本研究の新しい動向』, 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2013, 43~45쪽.

2 이러한 경향은 전체 일본(정치) 관련 연구자 수의 증가에서도 확인된다. 진창수,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한울아카데미, 2007, 15쪽; 이면우, 「한국의 일본연구 동향, 2000~2005: 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34쪽.

1995년부터 20년 동안에 이루어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1990년대 중반 이래 한국의 일본 연구는 비약적인 양적 발전을 이루어 왔는데, 이는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현상이 아닐까 생각된다.³ 현재 한국의 일본 연구는 이러한 양적 성장에 걸맞은 질적 발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일본 연구를 되돌아보고, 그 성과를 가감 없이 정당하게 평가한 후에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그 일환으로 해방 이후 한국의 일본 연구가 가진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역연구로서의 일본 연구를 선도하는 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해온 일본 정치 분야의 연구에 초점을 맞춰, 그 성과와 과제를 논하려 한다. 일본 연구의 성과를 돌이켜 보는 데 특히 정치 분야 연구에 주목하는 것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냉각된 한일 관계에 한국의 일본 연구가 가지는 문제점 내지는 책임을 짚어보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은 한국의 일본 연구에 대한 수많은 검토와 분석들의 성과 위에서 있다. 한국의 일본 연구는 늘 그 필요성과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자기 점검과 연구 내용에 대한 자기 검열을 요청받아 왔다. 그것은 한국의 일본 연구가 일반적인 지역연구에 요청되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인가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일본 연구들에 대한 검토와 분석, 즉 연구사 정리는 시대적 소명의식과 사회적 책무를 날카롭게 의식하며 새로운 연구 과제

3 동남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일본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는 태국과 베트남에서도, 일반 대중의 관심의 고조에도 불구하고 일본 연구자의 현저한 증가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岩井茂樹, 「タイにおける日本研究の現状と課題」, 郭南燕 編, 『世界の日本研究—日本研究の新しい動向』, 9쪽; Ho Hoang Hoa, 「ベトナムにおける日本研究」, 郭南燕 編, 『世界の日本研究—日本研究の新しい動向』, 39~42쪽. 또한 일본 연구와 관련한 국제 비교를 주제로 필자가 참석한 몇 차례 회의에서의 경험에 따르면, 중국에서도 일본 연구의 양적 급증이 뚜렷한 현상으로 보고되는 사례는 없었다. 또한 김상준과 서승원의 지적에 따르면 같은 시기에 구미의 국제 정치학계에서 일본 연구는 오히려 퇴조하고 있었다. Sangjoon Kim and Seung-won Suh, "Expanding Focus on Japan and the Bounded Dynamism of Japanese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 in South Korea,"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1(1), 2010, pp. 367~368. 따라서 이 시기 한국에서 일본 연구의 급증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연구 주제라 할 만하다.

를 도출하고 있어서, 그 자체가 하나의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점을 중시하여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본 연구사 정리’를 시도하고자 한다. 다른 한편 해방 후 한국의 일본 연구가 지닌 특징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역사적 유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대 한국의 일본 연구가 양적으로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활발한 것은 전근대 조선의 일본 연구가 중국을 포함한 당대 세계의 어느 국가보다도 활발하고 정확했던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해방 이후 60년대까지 한국의 일본 연구가 비교적 적었던 것은 오히려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일본 연구에 대한 검토는 한국의 일본 연구가 갖게 되는 특정한 성격의 조건과 배경을 분명하게 드러내 줄 것이다.

이하 제2장에서는 먼저 한국의 일본 ‘연구사 연구’를 정리 소개하면서, 각 시대의 ‘현대 일본 정치 연구’가 품었던 문제의식의 추이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그러한 문제의식의 기원과 배경을 시대를 거슬러 올라 전근대 조선 시대의 일본인식·일본론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제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일본 연구가 지닌 특징과 경향을 현대일본학회와 그 기관지 『일본연구논총』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현대일본학회와 그 기관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현대일본학회는 한국에서 현대 일본의 정치 분야 연구자를 망라한 거의 유일한 연구 공동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분야의 학회로서 가장 먼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도 신규 세대가 비교적 원활히 소통하며 문제의식의 계승과 공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일본학회에 대한 분석은 이 글이 지향하는 바의 대부분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2. 일본 연구에 대한 연구들: 일본 연구사 연구

1) 급성장의 시대: 1990년대의 총괄

한국에서 일본 연구가 본격적인 양적 급성장의 시대로 진입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김장권은 당시까지의 일본 연구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의 글로 6개의 기존 연구를 소개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⁴ 대체로 해방 이후 이 시기까지의 일본 연구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제1기를 해방에서 국교정상화까지, 제2기를 1965년에서 1980년까지, 그리고 1980년 이후 제3기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학문 내외적 여건으로 인해 일본 연구가 미발전 분야였다가 3기에 들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그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연구 주제들이 편향성과 과도한 실용성을 띤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난 뒤, 1991년 1월부터 1996년 6월 사이에 발표된 논문과 단행본 1444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1990년대 한국의 일본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 특징을 정리했다.

김장권에 따르면 1990년대 전반의 6년은 일본 지역연구의 ‘비약적인 성장기’였다. 이를 이끈 것은 일차적으로는 신진학자들의 일본 연구열과 일반 대중의 관심이었고, 연구자의 양적 증가와 학회 연구기관의 증가, 정부의 연구지원 정책 등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분석했다. 사회과학 특히 정치학 분야가 이러한 붐을 이끌고 있었다. 또 김장권의 분석 가운데 특기할 것은 이 시기 연구에서 일본 그 자체에 대한 연구가 ‘관계’ 연구나 ‘비교’ 연구보다 많았다는 사실이다. 한편 독창적 연구보다는 외국 연구의 소개와 개설 수준의 연구가 많다는 분석도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김장권은 일본 연구의 시각에 대해 언급하며, 이 시기 연구가 ‘주체적 시각’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과 ‘객관적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면서도, 1990년대 연구들이 대체로 후자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

4 김장권, 「일본지역연구의 현황과 과제: 1990년대의 성과를 중심으로」, 이상섭·권태환 편,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46~51쪽. 이 글은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에서 1996년에 발표된 연구 보고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김장권이 소개하는 기존 연구사 정리들은 다음과 같다. 중앙대학교 지역연구소 편, 『한국내 일본연구자에 관한 조사보고서』, 1988; 김승흠, 「일본정치 연구동향」,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편, 『우리나라 지역연구 현황, 문제점, 활성화 방안 연구』, 1990; 김용덕, 「일본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 지역연구 현황, 문제점, 활성화 방안 연구』; 한상일 외, 「특집: 한국의 일본연구 어디까지 왔는가」, 『일본학보』 제30집, 1993; 박용구, 「일본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역학연구회 편, 『지역학 연구의 과제와 방법』, 1994; 최상용 외, 『일본, 일본학』, 도서출판 오름, 1994.

다.⁵ 그런 의미에서 이 시기에 일본 연구는 한일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에 기인한 민족의 특수한 과제로서의 일본 연구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하여, 객관적 시각으로 이동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외국의 일본 연구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그에 입각한 연구들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일본연구의 ‘이중과제’, 즉 ‘한국적 연구방법론의 확립’과 ‘국제적 보편성의 확보’, 또는 ‘모델로서의 일본론(모델론)’과 ‘관계로서의 일본론(관계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이 시기의 일본연구가 서서히 의식하기 시작했던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어서 1990년대의 일본 연구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김유향에 따르면, 일본 정치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세대들의 등장으로 비로소 ‘하나의 과학적 연구대상으로 정립’됨과 동시에, 연구 영역 면에서도 다수의 전문가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전문 영역의 다양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⁶ 그러나 이 시기에도 여전히 일본과 미국의 일본 연구를 답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목표는 ‘한국적 일본 연구’의 정립에서 찾아졌는데, 일차자료에 대한 접근과 현지에서의 직접적 조사에 기반한 연구가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한국의 일본 정치 연구가 일본 및 미국의 학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⁷

2) 일본연구의 ‘이중과제론’: 성숙 이후의 과제설정

박철희의 연구사 정리에서도 재확인되듯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에 한국의 일본 정치 연구는 가장 큰 붐을 이루었다.⁸ 이는 같은 시기에

5 김장권,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68~71쪽.

6 김유향, 「현대 한국 정치학의 일본연구: 1990년대 이후 일본연구의 새로운 경향」, 『한국의 일본연구: 2000년, 연구동향과 논저목록』,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일본자료센터, 2000, 12.

7 김유향, 「현대 한국 정치학의 일본연구: 1990년대 이후 일본연구의 새로운 경향」, 8쪽.

8 Cheol Hee Park, "Who's Who and Whereabouts of Japanese Political Studies in South Korea: With a Focus on the Third Generation Japan Specialists,"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1(1), 2010, p. 312. 참고로 해방 이후 한국에서 일본 정치를 주제로 하여 작성된 박사 논문은 66건이다. 66건의 박사 논문을 연도별로 보면, 1975년 2건, 1980년 2건, 1983년 2건, 1986년 1건, 1988년 1건, 1989년 1건,

일본 경제가 최고의 붐을 이루는 것과 관계가 깊다. 일본의 성공은 커다란 관심이었고 일본 문제는 학위 논문의 주제를 찾던 대학원생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풍부한 연구비와 장학금을 제공하여 이러한 연구자들을 흡수했다. 때마침 한국에서도 세계화 바람이 일면서, 지역연구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일본은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지역연구 지원의 우선 대상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들이 일본 연구의 붐을 이끌었다.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이 시기 등장한 일본 연구자들은 일본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공유하고 있었다. 즉 일본에 대한 무의식적 반일 감정을 이어받으면서도 모델론으로서의 일본에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시기 일본 연구자에게는 한국의 일본 연구자들이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던 일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가 묻어 있었다. 그것은 이들이 198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의 주력 세대였다는 점에서 오는 자신감에 기인한 것이었다.⁹ 이런 자신감을 배경으로 이들 제3세대 연구자들은 전통적인 연구 주제들을 계승하면서도(*inheriting the tradition*) 연구 지평을 확대해 나갔고(*widening the horizon*), 일본 연구 어젠다의 세계적 전개에 동기화하면서(*synchronizing research agendas*) 새로운 연구 영역을 모색해 나가는(*searching for a new research area*), 질적 발전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¹⁰

나아가 박철휘는 제4세대 연구자 등장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 지구적 문맥에서 이해하는 데 익숙하고, 연구자로서의 성장 배경에서부터 이미 학제적인 특성을 지닌 제4세대 연구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연구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

1991년 1건, 1992년 4건, 1993년 1건, 1994년 6건, 1995년 5건, 1996년 3건, 1998년 1건, 2000년 1건, 2001년 7건, 2002년 1건, 2003년 5건, 2004년 1건, 2005년 1건, 2006년 4건, 2007년 4건, 2008년 3건, 2009년 1건, 2010년 3건, 2011년 2건, 2013년 2건, 2014년 1건이다. 2001년을 정점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후반에 걸쳐 증가세를 보이다가, 그 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9 Cheol Hee Park, "Who's Who and Whereabouts of Japanese Political Studies in South Korea: With a Focus on the Third Generation Japan Specialists," p. 312.

10 Cheol Hee Park, "Who's Who and Whereabouts of Japanese Political Studies in South Korea: With a Focus on the Third Generation Japan Specialists," pp. 315~325.

여, 일본 사회를 ‘국제 비교적 시각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론적 틀에서 분석’해야 하는 동시에 ‘한국적인 독특한 시각을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¹¹ 이것이야말로 바로 일본 연구에서의 ‘이중과제론’의 제기라고 할 만한 것이다.

한편 국제정치 분야에서 한국의 일본 연구를 정리 검토한 김상준과 서승원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본의 국제정치적 위상에 대한 연구(Japanese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 JIRS)는 1990년대 이전까지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탈냉전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런데 이들 연구는 현실주의에 입각한 국가주의적 시각(realistic nationalism)과 반일 민족주의(anti-Japanese sentiments)에 민감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고, 더구나 현실정치와의 불가분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과제가 제기되었다. 그것은 한일 양국의 특수한 역사적 유산에서 자유로우며 한일 관계의 정치로부터 분리된 일본 연구의 독자적 학술 영역을 확보하여, 한국적 고유 이론과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었다. 그것은 존재구속성(the principle of existential determination)을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했다.¹² 이는 바꾸어 말하면 역사환원론적 시각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으며, 그와 동시에 한국적 고유 이론 또는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또한 일본 연구에서의 ‘이중과제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학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관자의 연구사 정리와 문제 제기 또한 한국의 일본 연구가 처한 이중적 현실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있다. 조관자는 한국의 일본 연구가 2000년대 이후 자국의 근현대사를 일국사에서 벗어나 지구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한국 연구와 연동하면서, ‘특수한 일본 연구’에서 ‘보편적 일본 연구’로 발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일

11 Cheol Hee Park, “Who’s Who and Whereabouts of Japanese Political Studies in South Korea: With a Focus on the Third Generation Japan Specialists,” pp. 326~327.

12 Sangjoon Kim and Seung-won Suh, “Expanding Focus on Japan and the Bounded Dynamism of Japanese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 in South Korea,” pp. 383~384.

본 사회가 양적 ‘성장’의 시대에서 ‘성숙’ 사회의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이를 바라보는 한국의 일본 연구가 ‘성숙’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¹³ 이 또한 양적 성장의 끝과 질적 성숙의 처음이 겹치는 영역에서 이중 과제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요청에 한국의 일본 연구가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상, 한국에서 전개된 일본 정치 연구의 흐름에 대한 검토와 분석 및 문제 제기들을 정리하면, 한국의 일본 연구는 이미 ‘한국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연구에서 벗어나, ‘세계사적 보편성’을 획득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서 ‘한국적 특수성’에 입각한 연구는 식민지배의 역사를 과도하게 강조하거나(역사환원론), 또는 해방 이후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대전제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모델론)을 모두 포함한다. ‘세계사적 보편성’을 지향하는 연구는 지구적 권력 이동과 세계사적 문명 전환의 관점에서 일본을 바라보고, 거기에 한국을 연동시키는 태도를 말한다. 이때 일본과의 관계에서 얻은 ‘한국적 경험’을 ‘세계사적 보편성’으로 녹여내는 이중 과제의 수행이, 향후 가까운 미래에 일본 연구가 깊어져야 할 책무로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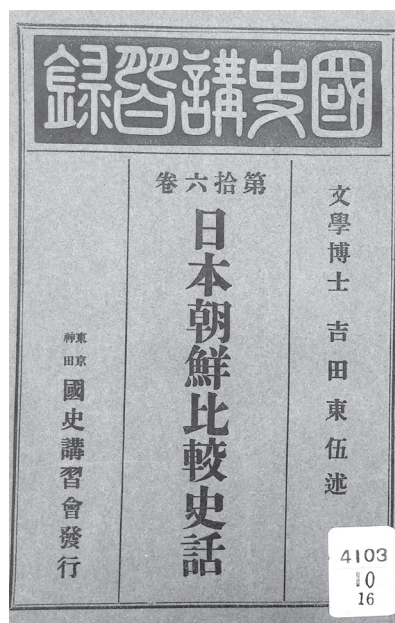
3. 일본연구의 선배들: 조선에서 해방 공간까지

1) 조선, 일본연구의 선진국으로 등장하다

그런데 이러한 이중과제론은 21세기에 들어서 처음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동아시아의 권력 이동과 문명 전환,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서 커다란 지형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있어왔던 일이다.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단일한 과제로서의 일본론이 조선 또는 한국의 역사에서는 지배적이라는 것이기도 하다. 단일한 과제란, ‘일본을 배제한 세계관으로 일본을 통제하기’라고 할

13 趙寛子, 「1990年代以降の韓国の日本研究—制度と視線の変化」, 51~5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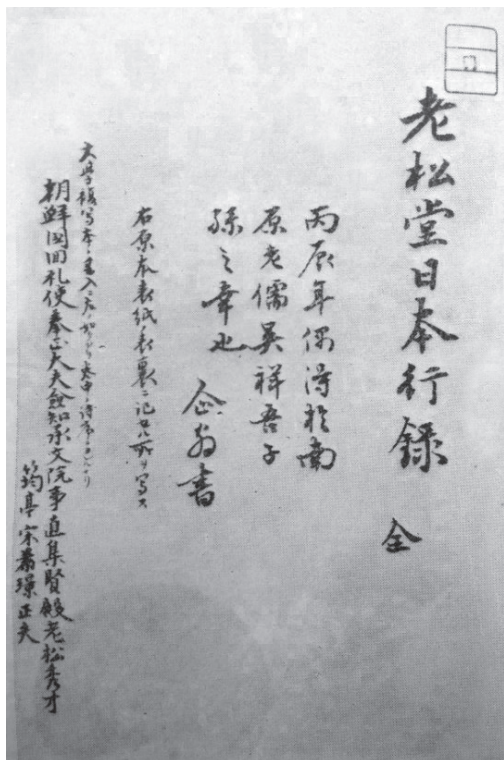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이 마주한 현실에서 일본은 언제나 쉽게 배제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언제나 ‘일본을 포괄한 새로운 세계관의 확립을 통해 일본을 포섭하기’를 과제로 삼게 되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조선·한국을 지배하는 ‘단일과제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늘 ‘이중과제론’의 형태로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하 이러한 점에 착목하여 조선의 일본 인식·일본론의 전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요시다 도고(吉田東伍)의 『일본조선비교사화』(日本朝鮮比較史話) 표지

조선은 사실 일본 연구의 세계적인 중심이었다. 요시다 도고(吉田東伍)는 『일본조선비교사화』(日本朝鮮比較史話) 중 「제5장 한인이 본 일본」(韓人の觀たる日本) 편에서 조선인의 일본 시찰이 서양인의 그것보다 탁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서양인이 보는 일본론의 경우 흥미 위주의 보고서가 대부분이어서 오류나 과장, 건강부회가 많으며 양질의 것이라 해도 순수하게 학술적인 관심에서 나온 것이라 긴장도가 낮고, 중국인의 일본론은 문예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조선인의 경우 파견되는 사신들의 학식이 높아 문장력 자체가 좋을뿐더러, 나가사키(長崎)의 서양인이나 중국인과는 문제의식과 태도부터 달랐다고 하여 그 기록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¹⁴ 그들의 태도가 진지했던 것은 조선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지리적으로 일본에 근접하고 문화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이었겠지만, 그

14 吉田東伍, 『日本朝鮮比較史話』, 國史講習會, 1924, 79~82쪽; 금병동, 최혜주 옮김, 『조선인의 일본관: 600년 역사 속에 펼쳐진 조선인의 일본인식』, 논형, 2008, 12쪽.



〈그림 2〉 송희경의 노송당일본행록 표지
[다니무라 이치타로(谷村一太郎)·오가와
도시가즈(小川壽一)의 교주본(校注本)에서]

에 더하여 왜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선출병 등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현실로 엄존하는 일본으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항상 일본을 잘 관찰하여 기록해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외교 기록에는 현재의 ‘일본론’에 상응하는 기록이 적지 않다.

조선인의 일본 기록 가운데 사료로 남아 있는 최초의 예는 송희경(宋希環)의 『노송당일본행록』(老松堂日本行録)이다. 송희경은 1420년[세종 2년, 오에이(応永) 27년]에 쓰시마(對馬島) 정벌의 사후 처리를 위해 일본에 파견되어 체재했다. 송희경 일행은 1420년 윤정월 15일에 한양을 출발하여, 4월 21일에 교토에 도착했다가 그해 10월 25일에 한양에 도착했으니, 장장 9개월 간의 여행이었다.¹⁵ 그때의 경험을 기술한 것이 『노송당일본행록』이다. 이

15 강재언, 이규수 옮김, 『조선통신사의 일본견문록』, 한길사, 2005, 43쪽.

것은 일본의 정치, 외교, 종교, 풍속 등을 기록한 일본관찰기로, 한국의 외교 교섭사 자료로도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기록이다.¹⁶ 일본의 정치와 관련해서는, 국왕(쇼군)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나 천황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¹⁷ 외교 교섭 상대는 천황이 아니라 국왕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조선 최초의 체계적 일본론으로 주목할 만한 저작은 신숙주(申叔舟)의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다. 신숙주는 1443년[세종 25년, 가키쓰(嘉吉) 3년]에 요시노리(義教)-요시카쓰(義勝) 계승의 경조통신사(慶弔通信使)로 파견되었던 사절단의 일원이었다. 『해동제국기』에는 일본과 류큐(琉球)의 왕정, 지세, 교린(交隣)의 연혁, 사자(使者)의 응접 방식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 중 「일본국기·천황대서」(日本國記·天皇代序)는 진무천황(神武天皇)으로부터 ‘당대의’ 스코천황(崇光天皇, 재위 기간은 1348~1351)까지 사적을 약술하고 있고, 오류가 적지 않지만, 조선인으로서 최초로 서술한 천황기(天皇記)로 객관적인 기술이 특징이다. 게다가 천황은 국정과 외교의 전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¹⁸ 신숙주는 임종 자리에서 성종의 물음에 대답하여 “바라는 것은 일본과 화(和)를 잃지 않는 것”이라 말했다고 한다.¹⁹ 임종에서까지 임금 앞에서 일본과 화친할 필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당시 조선 조정에 일본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2) 임진왜란, 일본 인식의 뒤틀림을 설정하다

임진왜란 시대에는 김성일(金誠一)의 『해사록』(海槎錄)이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요청에 응해 김성일이 1590년에 7개월간 일본에 체재할 때의 교섭 내용과 관찰한 문물이 기록되어 있다. ‘예와 의를 교제의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주체성에 기반한 외교’로 일본 측의 ‘부당한 대우’

16 강상운, 「宋希環著, 『老松堂日本行錄』, 『국제정치논총』 3권, 1964, 124쪽.

17 금병동, 『조선인의 일본관』, 21쪽.

18 신숙주, 신용호 외 주해, 『해동제국기』, 범우사, 2004. 그에 대한 해제로 손승철 편, 『『해동제국기』의 세계』, 경인문화사, 2008.

19 사에키 코오지(佐伯弘次), 「동아시아 세계와 『해동제국기』」, 손승철 편, 『『해동제국기』의 세계』, 4쪽.

에 저항하여 그들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켰다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일본의 문화적, 경제적 영위(營爲)의 성대함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김성일은 조선으로 돌아와 “일본과의 병화(兵禍)는 없다”라고 보고하여, 조선의 방어를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²⁰ 다만 김성일의 주장은, 통신사 일행이던 황윤길 등의 보고 내용이 일본에서 공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행동한 과오를 은폐하기 위해 펼치는 극단론이라 보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분석이 있어 이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적 연구가 필요하다.²¹ 또한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기보다 조선의 민심 안정을 우선한 것이었다는 분석도 있다.²²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일의 일화는 종종 일본에 대한 내재적 이해가 일본에 대한 낙관론으로 흘러, 결국 ‘본질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본’의 침략을 초래했다는 교훈으로 쓰이고 있다. 결국 당시 일본을 가장 ‘잘 알고 있던’ 김성일의 실패는 일본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탐구 자체가 위협시되는 풍조를 낳고 말았을 가능성이 있다. 거꾸로 구체적 전략에서 거의 ‘무’에 가까웠던 황윤길은 ‘일본위협론’이라는 깃발을 세워 놓은 것만으로 모든 ‘나태’가 용서되는 상황이 되었다. 시대를 건너뛰어 한말 일본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한 개화파의 실패는 김성일의 실패에 승수(乘數)가 되어, 해방 후 한국에서 객관적 일본 연구의 어려움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두 가지 사태에서 이러한 뒤틀림을 만든 요인은, 물론 일본의 ‘침략’이었다.

아무튼 임진왜란 후, 즉 김성일의 실패 이후 조선의 일본 관찰에는 지금의 일본 멸시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시각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임진왜란을 외교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1596년에 통신사로 일본에 파견된 황신(黃愼)의 『일본왕환일기』(日本往環日記)는 상당히 정확하게 당시의 일본 사회를 묘사하고 있지만, 할복자살의 풍습 등을 소개한 대목에서는 일

20 『宣祖修正實錄』第25卷, 24年 3月, 방기철, 『조일전쟁과 조선인의 일본인식』, 국학자료원, 2010, 148쪽에서 재인용. 정약용(丁若鏞)의 ‘비어고’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다. 정약용, 정해림 역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비어고, 민보의』, 현대실학사, 2001, 23~25쪽.

21 방기철, 『조일전쟁과 조선인의 일본인식』, 148~149쪽.

22 김명준, 『임진왜란과 김성일』, 백산서당, 2005, 28~53쪽.

본 풍습의 기이함과 두려움을 자아내게 하여, 이후 조선과 한국에서 발전된 거의 전형적인 일본론, 즉 ‘전투적이고 야만적인 문화의 일본론’, ‘음탕하고 잔인한 일본인론’들이 이것에서 발단한 것으로 보인다.²³ 임진왜란으로 일본에 납치된 조선인(피로인, 被擄人)들을 송환하기 위해 파견된 초기 조선통신사들의 대일 인식도 이와 비슷한 것이었다. 1617년 2차 통신사로 파견된 이경직(李景稷)의 『부상록』(扶桑錄)은 ‘쇄환’(刷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그 배경에 일본인의 ‘교묘함과 간사함’이 있다고 하여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²⁴

반면 이와 같은 전형적 일본 인식과 더불어, 전쟁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배경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조선의 전통적 대일 인식이 변화되는 양상도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 관료들에게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평창군수로 있던 권두문은 항전 끝에 포로가 되었다가 원주에서 탈출에 성공한 사람인데, 그는 『남천선생문집』(南川先生文集)에 21일 동안의 포로생활을 통해 관찰한 일본군의 생활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기록해 놓았다. 일본군의 잔인함과 무례함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생활 풍속에 대해서는 요즘말로 문화상대주의적 시각에서 일본인의 실상을 기록해 놓았던 것이다.²⁵ 이러한 문화상대주의적 시각은 피로인들의 일본 인식에서도 드러난다.

대표적인 피로인인 강항(姜沆)과 정희득(鄭希得)은 비록 일본인들이 한문을 모르지만 일본 고유의 글을 사용해서 언어생활을 하고 있으며, 일본에는 일본 나름의 예법이 존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강항의 『간양록』(看羊錄), 정희진의 『해상록』(海上錄) 등은 피로인들에 의한 대표적인 일본론으로서, 일본의 기술우대 풍조를 긍정적으로 전하는 등, 화이론(華夷論)에 사로잡히지 않고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²⁶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공식적 일본 담론이 일본 멸시론에 입각

23 금병동, 『조선인의 일본관』, 36~43쪽; 강재언, 『조선통신사의 일본견문록』, 61~74쪽.

24 강재언, 『조선통신사의 일본견문록』, 116~117쪽.

25 방기철, 『조일전쟁과 조선인의 일본인식』, 183~194쪽.

26 방기철, 『조일전쟁과 조선인의 일본인식』, 242~251쪽.

해 있으면서도, 비공식적 담론 공간에서는 일본의 다양한 문화적 정치적 실상이 비교적 정확하게 전달되어 상대주의적 관점에서의 일본론도 배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열은 이후 조선의 일본 인식에 하나의 정형처럼 자리 잡기 시작한다.

1607년에 최초의 통신사절로 일본에 파견된 경섬(慶暹)의 『경칠송해사록』(慶七松海槎錄)도 “일본의 국속(國俗)은 살인을 담용(胆勇)하다고 간주한다”며, “용맹과 무예만을 존중하여 인륜을 모른다”라고 비판하면서도, 절개와 의리에는 감탄하여 존중할 줄도 안다고 하여, 일본인의 성정을 높이 평가하는 일면도 있었다.²⁷

3) 조선통신사, 일본과 교린하며 경계하다

에도 막부(江戸幕府)와의 교린 관계를 상징한 통신사들도 그들이 관찰한 일본의 실상을 기록으로 남겼다. 초기의 통신사들은 교린하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태도였다. 위에 소개한 『부상록』도 일본의 풍속과 제도에 대해서는 관찰한 바를 담담하게 기록하면서도, 조선인 쇄환과 관련한 일본인의 태도에서 ‘교묘함과 간사함’이 보인다고 하여 분개하고 있는데, 1624년의 사절단 기록인 강홍중(姜弘重)의 『동사록』(東槎錄)도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 정권의 안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호전적인 각 번(藩)의 군사들에 대한 경계의 눈을 늦추지 않고 있다.²⁸ 한편 『동사록』은 일본에 대해 전면적인 ‘내재적 이해’를 시도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 통일을 평가하여, “히데요시는 우리나라에게는 한 하늘 밑에서 살 수 없는 원수이지만, 일본에서는 그의 공로가 있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일본 역사에서의 긍정적 역할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²⁹ 이러한 시각이 조선이 일본과 교린관계로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때마침 명청 교체기에 있던 동아시아의 국제 환경에서 북

27 금병동, 『조선인의 일본관』, 46~49쪽.

28 강재언, 『조선통신사의 일본견문록』, 143쪽.

29 강재언, 『조선통신사의 일본견문록』, 167쪽.

방 문제로 고민하던 조선이 남방관계를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현실적 고려가 작용하면서, 점차 조선은 일본과의 평화 우호 정책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입장이 이후 통신사의 일본 관찰에서도 발견된다. 그것은 일본의 학문에 대한 평가와, 이러한 평가에 입각한 일본 유학자들과의 대등한 교류로 이어졌다. 1636년 4차 통신사의 일행으로 다녀온 김세렴(金世濂)의 『해사록』에서는, 그가 일본 유학자 하야시 라잔(林羅山)과의 교류를 통해 그의 학문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조선에 돌아와 국왕이 일본의 사정에 대해 묻는 데 대해 일본에 문장을 자유로이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서, 길가와 에도에서 찾아 온 많은 사람들이 주자학의 기본 개념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을 얹잡아볼 수 없다”고 대답하고 있다.³⁰ 이를 통해, 여전히 일본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당시의 풍조를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무사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학문적 역량도 갖추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로보아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침 일본에서는 5대 쇼군 쓰나요시(綱吉)가 숭유정책을 펴면서 일본의 유학이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등 쟁쟁한 일본 유학자들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이 시기 통신사를 매개로 한 조일(朝日) 간의 학문적 유대는 더 강하게 인식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선은 제7차 통신사 이후 일본의 평화 우호 정책에 마음을 열게 되었다. 이러한 평가는 일본에 대한 적극적 평가이긴 하나, 그러한 평가의 기준이 ‘유학’에 있다는 점에서 문물에 입각해 있다기보다는 이념에 기울어진 평가라고도 할 수 있다.

1719년의 사행기록인 신유한(申維翰)의 『해유록』(海游錄)은 이 시기 조선의 일본 관찰의 백미라고 할 만한 서적이다. 신유한은 일본의 통치 방식이 유교적인 예교가 아니라 병제를 통한 군법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서적 출판이 왕성해 ‘천하의 장관’을 이룬다고 하여 일본 문물의 풍성함도

30 강재언, 『조선통신사의 일본견문록』, 194쪽.

소개하는 균형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³¹

4) 실학자와 조사시찰단, ‘있는 그대로의 일본’을 관찰하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 교린 관계의 붕괴를 예감하면서 새로운 태도로 그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기술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다시 일본을 ‘있는 그대로’ 보려 하는 학자들에게서 나타났다. 실학자 이익(李瀾)의 『성호사설유선』(星湖僞說類選)이 대표적이다. 이익은 일본의 국학 융성과 존왕론을 경계하여 천황이 통치의 중심이 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² 이익은 『성호사설유선』의 「일본충의」(日本忠義) 편에서, 일본에서 천황을 복권시킨다는 명의를 정당하게 나오고 있으니, 이에 66주의 태수들이 호응하게 되면 “저편은 천황이요, 우리는 왕이니 장차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³³ 이러한 인식은 1764년의 사행기록인 조엄(趙巖)의 『해사일기』(海槎日記)의 일본 관찰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해사일기』는 쇼군의 권위가 실추하면서 일본에서 존왕주의(尊皇주의)가 대두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³⁴

한편, 정약용의 『일본론』(日本論)과 이덕무(李德懋)의 『청령국지』(蜻蛉國志) 등으로 대표되는 18세기 후반 실학파의 일본 연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에 기원을 둔 ‘무’의 일본관에서 탈피하여 ‘문’의 일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경향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정약용은 『일본론』의 1과 2에서 일본의 예의와 문물이 과거에 비해 발전했고, 동아시아의 현실이 일본의 침략을 용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일본의 위협에 대해 당장 임박한 것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³⁵ 그러나 이후 일본 측의 내부 문제와 사상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통신사 파견과 접수를 통한 한일 교류는 뜸해졌다.

31 강재언, 『조선통신사의 일본건문록』, 265~267쪽.

32 금병동, 『조선인의 일본관』, 55~57쪽.

33 이익, 정해림 편역, 『성호사설精選 (중) 歷史評論과 歷史敎訓(史)』, 현대실학사, 1998, 374~375쪽.

34 강재언, 『조선통신사의 일본건문록』, 307~309쪽.

35 하영선, 『역사 속의 젊은 그들』, 을유문화사, 2011, 85쪽.

이처럼 소원한 양국 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동아시아는 서양 문물의 급격한 유입이라는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근대화의 격랑’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 환경을 배경으로 조선에서는 일본 경계론이 확산되어 ‘위정척사’(衛正斥邪)라는 사상 조류를 낳고 있었고, 일본에서는 대조선 방침이 교린에서 정한으로 무게가 이동하여 ‘조선멸시론’과 ‘정한론’이 대두되었던 것이다.³⁶

이렇듯 19세기 들어 국제 질서의 급격한 변동과 이에 적응하는 일본의 변화를 배경으로 일본론은 다시 분열되어, 실체로부터의 분리가 진행되었다. 그것은 일본이라는 인식 대상이 이중적이었던 데 더해 이를 인식하는 조선의 지식인들의 이중적 심리가 투사된 결과였다. 그 결과, 근대 조선의 일본관은 ‘애증의 복합심리’가 작용하는 이원성을 특징으로 하게 되었다. 이는 ‘비난과 예찬’, ‘배제와 수용’의 양 극단의 논리가 복잡하게 교차하는 일본론으로 나타나고 있었다.³⁷ 나아가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로 근대적 국교를 수립한 이후 조선에서의 일본론은 모델로서의 일본론과, 저항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일본론의 양 극단으로 나뉘게 된다. 조선의 내셔널리즘이 일본에 의한 근대화와 일본에 의해 저해된 주체화를 거침에 따라 친일-부일(附日)-반일-항일의 내셔널리즘으로 분화되었기 때문이다.³⁸

그런 가운데 근대적 사회과학으로서의 지역 연구로 일본론이 시도되고 있었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1881년 일본에 파견된 조사시찰단이 남긴 보고서들이 그것이다. 어윤중(魚允中)의 『재정견문』과 『일본대장성직제사무장정』, 강문형과 민종묵·엄세영·이현영 등의 『문견사건』, 엄세영의 『일본사범성시찰기』, 강문형의 『공부성』, 박정양(朴定陽)의 『일본국문견조건』, 『일본국내무성직장사무』, 『농상무성직장사무』, 조준영의 『문부성』, 홍영식(洪英植)의 『일본육군총제』(日本陸軍總制), 심상학의 『일본문견사건초』와 『외무성』

36 손승철, 『조선통신사, 일본과 통하다』, 동아시아, 2006, 207~210쪽.

37 장인성, 「근대조선 일본관의 구조와 성격」, 김용덕·미야지마 히로시 공편, 『근대 교류사와 상호인식, I』,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0, 174~181쪽, 212쪽.

38 남기정, 「전후 한국 민족주의와 한일관계: 민족주의의 두 속성에 주목하여」, 현대일본학회 편, 『21세기 한일관계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비전』, 한울아카데미, 2007, 98~118쪽.

등은 실체로서의 일본 연구의 맹아(萌芽)라 할 만한 보고서들로,金玉均(金玉均)이나 박영효(朴泳孝), 유길준(兪吉濬)의 저작 못지않게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³⁹ 그러나 이러한 보고서류의 일본론은 이후의 정치 상황과 맞물리면서, 더 이상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타자 인식으로서의 지역 연구로 발전되지 못했다. 이는 애석한 일이지만, 이들 보고서류의 일본론은 이후 한국의 일본 연구에서 보이는 ‘모델로서의 일본론’의 원류가 될 만한 것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5) 한 사회민주주의자의 일본론: 목적 의식적으로 사실을 추구하다

이후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주체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일본 연구는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식민지에 순응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일본에 대한 투쟁과 승리를 목표로 한 입장에서조차 일본을 객관적 타자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조선이 일본 제국주의에서 이탈하여 해방되는 순간부터 일본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비로소 가능해졌으며 임박한 속제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현재 확인되는 당시의 일본론들을 살펴보면, 일본에 대한 해방 직후의 연구들은 대개 미국의 시각을 통한 것들이었다. 그것은 대개 일본 점령의 주체인 맥아더 총사령부의 일본에 대한 분석 보고서들이 번역 소개된 것이었거나,⁴⁰ 민주화와 비군사화를 중심으로 한 전후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일본인들의 논평이 그대로 번역되는 수준이었다.⁴¹ 그러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인의 주체적 시각에서 집필된 일본론이, 1954년에 출판된 김철의 저서 『일본: 민주화의 좌절』이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전후의 일본이 민주국가로 소개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그 사실 여부가 ‘절박한 의문’으로 제출되고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해답 찾기를 시도하

39 허동현, 『일본이 진실로 강하더냐』, 당대, 78~91쪽, 199쪽.

40 聯合軍司令部 編, 『日本戰爭犯罪史: 滿洲事變으로부터 降伏調印式까지의 真相』, 東洋書院, 1946; 金哲宇 編, 『日本戰犯裁判記』, 朝鮮政經研究社, 1947; 리차아드 라우터백, 崔永植 譯, 『맥아더 治下の日本』, 博文出版社, 1949.

41 崔武吉 編, 『(敗亡日本)軍閥의 黑幕』, 國際文化協會, 1946.

고 있다.⁴² 저자는 서문에서 “다만 사실을 추구하기에 힘썼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무릇 대상에 다소의 호의를 가졌거나 반대로 혐오를 느낀다고 하여 사실에 눈을 가려서는 안 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대외 정책이 “마땅히 타당한 인식에 입각하여 내외의 일반적인 공명을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초 위에 수립되고 수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다. 이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대일 정책이 반공과 반일이라는 이데올로기의 극단을 오가며 거의 파탄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이를 위해 저자는 일본의 민주화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저자는 총사령부의 민주화 노력이 완결되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된 것이라고 최종 판단하고 있다. 사실상 일본의 민주화는 ‘거름(결음, 원문대로)을 멈추었기 때문’이었다.⁴³ 미국의 민주화 노력은 “중도에서 폐기되고 지금 구체제로 복귀하는 과정이니 이는 날로 민주주의의 실질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일본의 민주화는 좌절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재군비 문제에 대해 저자는 매우 냉정한 분석에 기반해 합리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즉 요시다의 뒤를 이을 보수 연합정권은 헌법 개정을 시도할 수 있겠지만,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는 것이 곤란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9조의 개정은 곤란할 것이라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이미 이 당시에 “징병제와 전쟁을 예상하는 개헌은 먼저 정치 이전에 속하는 소박한 대중적 반대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여 내린 결론은 매우 정확한 것이었

42 김철, 『일본: 민주화의 좌절』, 부흥서원, 1954. 김철은 함경북도 경흥 출생으로 1945년 경성고등학교(鏡城高等學校)를 졸업한 뒤 1949년 일본 도쿄대학(東京大學) 역사철학과에서 연구생으로 수학했다. 1949년 제일거류민단 기관지 『민주신문』 편집국장, 1950년 일본 『요미우리』(讀賣新聞) 서울특파원, 1961년 혁신계의 『민족일보』 논설위원을 지냈고, 1955년에는 제일거류민단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1957년 민주혁신당 대변인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 이후 한국사회당, 통일사회당, 사회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 정당의 발전을 위해 진력한 바 있으며, 1971년에는 통일사회당 후보로 제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네이버 지식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검색,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3695&cid=46626&categoryId=46626> (최종 검색일: 2015. 1. 10).

43 김철, 『일본: 민주화의 좌절』, 240~243쪽.

다.⁴⁴ 또한 일본에서 민주주의의 전망이, “미래에 희망을 부칠만한 이유”를 가질 수 있다고 하여, 그 근거로 전후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즉 “아직 일본에는 점령 하에 발전된 자유로운 언론과 약간의 민주적 제도가 남아 있으며 민주화의 분위기 가운데서 성장한 젊은 세대가 역시 시대를 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의 세계사적 전진의 기운”이 일본 국민 사이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면, 일본의 민주화는 비록 성공과 좌절의 중간 정도에 머무르고 있기는 하지만, 장래 “충분히 민주화되는 날도 오기는 올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며 마무리하고 있다.⁴⁵

그러나 김철이 시도한 객관적 일본 연구는 이후 절멸되다시피 했다. 한국에서 해방과 전후의 시대가 강렬한 반일과 항일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이 일단락되었던 1960년대 중반부터는 모델로서의 일본론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다만 모델로서의 일본론은 한편으로는 김철이 시도한 객관적 일본론의 성과를 일부 계승하고 있다. 1968년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주최한 일본 문제 세미나는 김철의 일본 인식을 계승하여 재확인하면서도, 한국의 일본 연구가 지향할 목표로서, 모델로서의 일본 연구를 제시함을 선포한 사건이었다고 기록될 것이다. 즉 전후의 일본이 “종전(終戰) 전의 제정(帝政) 일본인 경우가 없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또한 전전(戰前)의 일본과는 “다른 점도 허다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군국주의를 벗어나 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는 일본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나아가 동아시아의 현황이 “싫든지 좋든지 한일 간의 협조가 요청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현대 일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공평한 인식이 앞서야 할 것이고 또 이를 위한 학도의 학구적 노력이 요청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목적론적 일본론을 위한 객관적 일본 연구의 실천이 전면적으로 선언되었던 것이다.⁴⁶

44 김철, 『일본: 민주화의 좌절』, 344~345쪽.

45 김철, 『일본: 민주화의 좌절』, 347~349쪽.

46 「취지문: 일본 문제 세미나」,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제7권, 1968. 세미나에서는 세 개의

이후 한국의 일본론과 일본 연구는 일정한 ‘목적 달성’을 명분으로 한 ‘객관적 이해’를 전면에 내걸고, 학문으로서의 영역을 확보하고 내용을 확보해 가게 되었다.

4. 현대일본학회와 『일본연구논총』

1) 한국의 사회과학자들, 일본연구공동체를 만들다

다음으로 한국의 일본 연구를 선도해온 현대일본학회의 활동에 초점을 맞춰 활동의 경위와 한국의 일본 연구의 특징과 가능성을 살펴보려 한다. 한국 최초의 일본 관련 학회는 1973년에 창립된 한국일본학회다. 이 학회는 전국 규모의 포괄 학회로, 일본 관련 학회로서는 한국 최대 규모이지만, 어학과 문학이 중심이고,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지역 연구로서 일본 연구에 착수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이에 비해 현대일본학회는 처음부터 사회과학적 지역 연구로서 일본 연구 확립을 목표로 하여 탄생했던 것이다.

한배호(韓培浩)에 따르면, 현대일본학회의 전신인 현대일본연구회는 1978년 9월에 창립되었다. 창립 멤버는 서울시 안국동에 위치한 ‘경향’이라는 이름의 한정식 노포(老鋪)에 모인 10여 명이었다. 회장은 당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직책은 모두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존칭은 생략한다)였던 한배호가 선출되었다. 또 당시 창립 회원이자, 총무간사로 선출된 한상일(韓相一)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회고에 따르면, 실질적인 창립은 1977년이었다고 하나, 공식적으로 현대일본연구회라는 명칭을 쓴 것은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1부에서는 권오기 당시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전후 일본의 정치」에 대해, 제2부에서는 김종현 당시 서울대 상대 교수가 「현대 일본의 경제」에 대해, 제3부에서는 박준규 당시 서울대 문리대 교수가 「한국과 일본」에 대해 발제했으며 구범모, 권오기, 김규남, 김상협, 김운태, 김종현, 민병기, 박관숙, 박봉식, 박준규, 설한준, 손제석, 신기석, 양호민, 오지택, 유정렬, 이갑섭, 이기원, 이명식, 이용희, 이창렬, 임종철, 정도영, 주종환, 차기벽, 최종기, 최창락(가나다순, 존칭 생략) 등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1978년이었다. 또 한 명의 총무간사에 김용서(金龍瑞)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구간사에 어수영(魚秀永)과 유근호(柳根浩), 편집간사에 길승흠과 박충석(朴忠錫) 등이 선출되었다. 회장인 한배호는 프린스턴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1970년에 귀국했다. 1971년에 고려대 교수가 되어, 동시에 동(同) 대학 아세아문제연구소 일본연구실장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배호는 일본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⁴⁷

한배호의 일본 연구에 대한 태도는, 우선 비교정치의 한 분야로서 연구하는 것, 그리고 한일 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이바지하는 연구를 목표로 하는 것 등 두 가지였다. 당시 한국 학계의 분위기는 일본 연구의 필요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당치않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본에 대한 광범위한 무관심이 퍼져 있었고, 논의가 있다고 해도 ‘시사해설 수준’에 머무르거나, 반일 감정에 치우친 논의에 압도되어 있어서, 그러한 비학문적 일본론을 학문적이고 사회과학적인 일본 연구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사명을 다하겠다는 뜻을 회원들이 공유하여 발족한 것이 현대일본연구회였다. 그리고 1979년 11월에 『일본연구논총』이 창간되어, 기획과 출판을 중심으로 연구회 활동이 전개되었다.

또한 현대일본연구회 회원들은 손수 대학 교재 출판을 결의하고, 1981년에는 연구회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일본정치론』을 출판했다. 이 책은 ‘대한민국 최초의 일본정치 교과서’였다. 한편 『일본연구논총』은 1981년과 82년, 84년에 「국권론과 민권론」, 「자민당 정권의 장기 집권연구」, 「일본의 정책 결정의 해부」라는 기획으로 제2호, 제3호, 제4호가 발간되었고, 이들은 같은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이로써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일본 정치 강의용 교재가 갖춰졌다.

이처럼 현대일본학회의 활동이 학술지 발간과, 그 뒤를 잇는 교재 출판이라는 형태로 결실을 맺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던 무렵, 한국의 지역 연구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한 소련·동구

47 한배호, 「현대일본학회의 30년을 회고하며」, 『일본공간』 제3호, 2008, 232~233쪽.

의 민주화 운동은 단기적으로 소련·동구권 연구의 특수를 가져왔으나, 소련이 붕괴하자 공산권 연구가 쇠퇴하여, 이와 동시에 지역연구 전체가 위축되는 시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현대일본학회는 처음부터 외부 연구비에 의존하지 않는 체제였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본래의 연구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⁴⁸

오히려 위기는 다른 곳에서 찾아왔다. 1990년 중반에 현대일본연구회의 중심 멤버들이 각 대학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어 학회 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학회를 구제한 것은 일본 연구의 '제3세대 연구자'들이었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걸쳐 해외에 유학하고 있던 유학파가 귀국해 현대일본학회의 신입회원으로 가입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특히 일본 유학파는 유학 시절부터 계속해서 '재팬 스터디'라는 연구모임을 가졌는데, 구성원 대부분이 그대로 현대일본학회의 회원이 되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도 현대일본연구회와 '재팬 스터디'를 통합하는 형태로, 현대일본학회가 탄생했다. 이 시기에 가입한 제3세대 연구자 중에서 2007년에는 학회의 회장이 배출되기도 했다. 김호섭(金浩燮)이 현대일본학회의 13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이는 학회의 세대교체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김호섭 회장 시기에는 학회를 국회의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재단 설립을 위한 기금을 확보했다.

2) 『일본연구논총』, 일본연구를 기획하다

이제 『일본연구논총』의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창간호부터 2000년에 발간된 제12호까지는 기획 중심의 편집방침이 관철되었다. 제12호까지는 각 호의 권두에 회장이나 출판간사의 권두언이 실려 있어, 기획의 방향이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2001년 여름에 출간된 제13호부터는 연간 2회 출판하게 되었고, 심사체제로 전환했다. 이것은 우선 1990년대 중반 이후 회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원의 급증과 함께 당시까지 '클럽'

48 한배호, 「현대일본학회의 30년을 회고하며」, 246쪽.

이나 ‘살롱’과 같이 운영되던 학회를 좀 더 많은 일반 연구자들에게도 개방하는 체제로 바꾸어갈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적으로도 민간 지원이나 기부에 의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으려면 재단이 요구하는 자격을 구비할 필요도 있었다. 심사제도로 전환한 후로 개별 논문의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통일된 방향성을 제시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일단 특집 중심의 편집이 있었던 초기의 『일본연구논총』을 분석함으로써, 현대 한국에서 일본 연구의 초창기 상황과 그러한 상황 안에서 현대일본연구회 회원들이 고투했던 사정을 파악해보려 한다.

1979년에 발간된 『일본연구논총』 창간호에는 연구대상으로서의 일본이 특수한 이미지로 존재하는 한국의 상황이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다. 한국에서 일본은, 식민지 지배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안겨준 나라이자,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이며, 또한 패전 후의 경제 부흥을 거쳐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나라였다. 당시 소련과 중국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지역 연구로서의 학문적, 정책적 연구가 그 깊이와 외연을 넓혀가던 중에, 한편으로 “일본은 다 아는 것”처럼 되어 있는 지적 풍토에 경종을 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에 막 관심을 갖게 된 “비(非)기성세대에게 진지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조직하고 학술지를 창간하게 되었다고 경위를 밝히고 있다.⁴⁹

창간호의 집필은 김승흠, 어수영, 김용서, 신희석(申熙錫), 한상일, 장을병(張乙炳), 이정복 등 7명이 담당했다. 주제는 전후 정치, 근대 정치외교사, 비교정치, 정치커뮤니케이션 등으로 통일성이 결여되긴 했으나, 당시 일본 연구로서는 첨단을 걷는 내용이었다. 게재 논문은 대부분 박사 논문에 기초한 것으로, 최신 연구였다. 박사 학위를 받은 대학은 미시간대학(김승흠과 어수영), 클레어몬트대학(한상일), 워싱턴대학(이정복), 도쿄대학(김용서, 신희석), 성균관대학교(장을병) 등이었다. 창간호 말미에는 회원 명부가 첨부되어 있는데, 26명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49 한배호, 「창간사」, 『일본연구논총』 창간호, 1979, i쪽.

제2호도 특집으로 꾸며졌다. 「국권론과 민권론」이라는 제목 아래, 일본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 민주주의가 일본 고유의 전통적·토착적 요소와 어떻게 갈등하고 조화하면서 일본 사회에 뿌리내렸는지를 고찰했다.⁵⁰ 이는 당연히 당시의 한국적 정치 상황에 대한 고민이 담긴 주제였다. 제2호에는 회원 10명의 논문과, 영일동맹(英日同盟)에 관한 비회원 한국인 연구자, 그리고 이시다 다케시(石田雄)와 야마다 쇼지(山田昭次) 두 사람의 논문이 실렸다. 제3호의 특집은 「자민당의 장기 집권」에 관한 주제였다. 당시 자민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는 정당”이지만, “독재나 전제 정당으로 변모하지 않고 선거에 의해 정권을 유지”했고, “정치체제 역시 민주주의적인 방법에 의해 운용”되고 있었다. 이는 1980년대 초의 한국적 상황에서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⁵¹ 제2호와 마찬가지로 제3호도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미래를 일본 정치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구상해 보려는 의도에서 기획되고 발간된 것이었다. 그것은 일본의 민주주의가 한국이 추구할 모델로 적합한지를 따지는 것이기도 했다. 제3호 발간 시점의 회원은 24명이었다.

창간으로부터 5년이 지난 1984년에도, 일본 연구를 둘러싼 환경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일본연구논총』 제4호(1984년 8월)의 서언에서 회장 양호민(梁好民)은 출판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⁵² 1984년은 한일 국교정상화로부터 20년이 되는 해인데, 정부 차원에서는 친선과 협력을 구가하고 군사적으로도 서로 자국의 안전에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반면, 국민 간의 상호 이해는 “아직은 간단히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적 목표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하여, 현대 일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나, 한국의 일본 연구는 아직 맹아기에 있다고 보았다. “시류적인 일본 이해나 상식적인 일본 소개를 넘어”, 일본을 과학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스스로의 입장에서 일본 문제를 엄밀히 규명해가기 위해

50 유근호, 「책을 내면서」, 『일본연구논총』 제2호, 1981.

51 어수영, 「책을 내면서」, 『일본연구논총』 제3호, 1982, 3쪽.

52 양호민, 「서언」, 『일본연구논총』 제4호, 1984, 5~7쪽.

서는 전문 학자들의 착실한 노력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제4호가 이러한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내정과 외교·방위 문제를 둘러싼 정책결정과정을 주제로 하여 5편의 논문을 게재한다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회원은 여전히 24명이었다.

『일본연구논총』 제5호(1986년 4월)를 발간하면서, 최초로 한일 연구자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다. 제5호에는 한일 관계, 한국의 대일 정책, 일본의 대한 정책을 포함하여 한-일, 북한-일본, 한-미-일 관계 등에 관한 10편의 논문이 실렸다. 이 중에는 마스미 준노스케(升味準之輔), 사카모토 요시카즈(坂本義和), 후쿠시마 신고(福島新吾), 와타나베 도시오(渡辺利夫), 이로카와 다이키치(色川大吉) 등 일본인 연구자의 논문도 게재되어 있다. 제5호는 「한국과 일본: 전후 4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비공개 학술회의의 성과였다. 제5호에는 “과거의 청산”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의 방향설정”이라는 말이 주로 등장했다. 나아가 “전후의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아세아태평양 지역은 가장 큰 변화의 발상지”였다는 점에서, “전후의 국제 질서 안에서 양국 관계를 논할” 때가 왔음을 언급하면서, 양국이 가장 중요하게 합의한 전제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에 우리 모두 코미트하고 있다”는 점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만 이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차이는 개별 국가의 국익이라는 범주 안에서 정당화되고 방어되어 왔다. 따라서 양국 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국익을 타국의 척도로서 측정하려는 아집에서는 탈피하고, 어떤 공동의 척도를 창출할 과제를 안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일본이 지닌 의회민주주의 제도가 다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개방성에서 나오는 정치적 제약성을 인정하고, 반면 일본은 한국이 처해 있는 바 국토 분단에서 오는 모든 정치적인 부담을 이해하는 입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을 토로했다. 이러한 정황과 내용들이 제5호 특집 주제의 배경을 이루었다.⁵³ 회원은 24명이었다.

53 오기평, 「회장 인사」, 『일본연구논총』 제5호, 1986, 3~6쪽.

1989년에는 한국 정치의 거울로서의 일본론이 등장했다. 『일본연구논총』 제6호(1989년 12월)의 특집은 ‘현대 일본의 혁신 세력’이었다. 세계적으로는 소련과 동구의 ‘혁명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국내적으로는 진보와 혁신을 부르짖는 사회 세력에 이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혁신 세력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되리라는 인식 하에, 일본의 혁신 세력, 노동 운동, 사회당·공산당의 활동과 그들의 대외 정책 등을 분석했다.⁵⁴ 1989년을 기하여 회원은 35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이른바 제3세대의 등장을 의미했다.

3) 제3세대 연구자들, 모델론으로부터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다

1990년대에 들어 모델로서의 일본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 대상으로서의 일본론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 변화의 조짐을 『일본연구논총』 제7호(1991년 10월)에서 살펴볼 수 있다. 권두언에서 박충석(朴忠錫)은 일본이 “경제 대국을 그 기반으로 하여 군사 대국, 그리고 나아가서 정치 대국에로의 도약을 용의주도하게 시도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특집이 꾸며졌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의 ‘가해자’이자, ‘패자’(敗者)였다는 인식이 사라지고 있는 듯 보인다면서도, 이러한 변화의 기반이 된 경제 성장의 기적과 구조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성과 과제를 발견하고 있다.⁵⁵ 특히 제7호의 특집은 일본에 대해 정치경제적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회원은 41명으로 증가했다. 제7호부터 집필자는 김성철(金成哲), 염재호(廉載鎬, 스탠퍼드대학), 김호섭(미시간대학), 김장권(쓰쿠바대학) 등 미국과 일본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제3세대 연구자들을 포함하게 되었다. 그들에 이어서, 하버드대학, 미시간대학, 캘리포니아대학 로스앤젤레스·버클리, 예일대학, 시카고대학, 옥스퍼드대학, 도쿄대학, 히토쓰바시대학 등을 졸업한 새로운 회원들이 들어왔다. 신규 회원 중에는 사회학이나 경제학 전공자들도 있어, 학제 간에 다양한 학술적 연구가 가능한 진용이

54 이상희, 「권두언」, 『일본연구논총』 제6호, 1989, 3~4쪽.

55 박충석, 「권두언」, 『일본연구논총』 제7호, 1991, 3~4쪽.

갖춰졌다.

『일본연구논총』 제8호(1993년 12월)도 기본적으로는 제7호와 같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는 자민당 장기 정권이 붕괴하고 연립정권이 들어선 시기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일본의 특수성이 문제시되고, 일본의 변혁이 모색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게재된 논문은 21세기 일본의 위상을 전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⁵⁶ 회원은 48명이었다. 한일 국교 정상화 30주년인 1995년경부터는 그러한 변화의 출발점에 있는 일본과 새로운 관계에 입각하여, 21세기의 한일 관계를 구축해 갈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회원의 증가라는 주객관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대일본연구회’는 ‘현대일본학회’로 개칭하게 되었다. 이렇게 변화된 인식과 진용을 반영하여 발간된 것이 ‘21세기의 한일 관계’에 관한 특집으로 꾸며졌던 『일본연구논총』 제9호(1997년)⁵⁷와 1997년 4월에 개최된 「21세기 동아시아의 리더십」(“Leadership of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의 발표문 논문집인 『일본연구논총』 제10호(1998년)다. 제10호는 영어로 출판된 만큼,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다. 한일 관계를 아시아태평양이라는 넓은 맥락에서 파악하려는 자세가 보인다는 점이다. 집필자는 도널드 헬먼(Donald C. Hellmann), 찰머스 존슨(Chalmers Johnson), 후쿠이 하루히로(福井治広), 이정복, 다니 사토미(谷里美), 이치무라 신이치(市村真一), 김성철, 염재호 등이었다.

『일본연구논총』 제11호(1999년)는 제3세대 연구자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집필자는 김영작과 한상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3세대 연구자였다. 해외에서 본격적으로 일본을 주제로 공부한 소장연구자가 대거 귀국하면서 사회과학적·학술적 일본 연구란 본연의 임무가 마침내 가능해진 때문인지, 초대 회장인 한배호가 「학문과 정치 현실: 갈등하며 공존하는 두 세계」(권두 논문)에서 현대일본학회의 활동을 회고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일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중 일본을 접한 것이 하나의 계

56 김승흠, 「머리말」, 『일본연구논총』 제8호, 1993, iii~iv쪽.

57 『일본연구논총』 제9호는 1995년 3월 24~25일에 개최된 국제학술대회 논문집을 발행한 것이다.

기가 되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학회 등에서 중국과 일본이 사회과학의 분석 대상으로 객관적인 방법론에 기초하여 연구되고 있는 것에 자극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미에서는 학자나 저널리스트가 일본 연구를 수행하나, 한국에서는 “문학적 상상력이 넘치는 문학평론가”들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고 총괄하는데, 이것은 『축소지향형의 일본인』을 쓴 이 어령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배호는 한국적 정치현실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전망을 갖는데 일본의 정치를 연구하는 의의가 있다고 하여 학문연구와 정치현실에 대한 개입이 ‘긴장하는 공존관계’임을 역설하고 있다.⁵⁸

제11호에 함께 게재된 김영작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에서의 일본연구 동향: 정치 외교 분야를 중심으로 본 회고와 전망」은, 전후 한국의 일본 연구의 총괄이다. 여기서 김영작은 일본의 정치외교, 군사·안전보장과 한일 관계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1945년부터 1999년 6월까지 출판된 단행본(320권), 석사·박사 논문(380편), 『정치학회보』 수록 논문(40편), 『국제정치논총』 수록 논문(43편), 『일본연구논총』 수록 논문(74편) 등 방대한 양의 연구를 분석하고 있다. 김영작은 이들 연구의 시기를 구분해, 1945년부터 1999년까지 54년을 네 개의 시기로 나누고 있다. 제1기는 1945년부터 1965년까지의 ‘공백기’(혹은 ‘폐임기’)다. 제2기는 1966년부터 1980년까지의 ‘요람기’(혹은 ‘육아기’), 제3기는 1981년부터 1990년까지의 ‘소년기’(혹은 ‘성장기’), 제4기는 1991년부터 1999년까지의 ‘청년기’다.⁵⁹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 연구의 반 이상이 제4기의 10년 동안 발표된 것들이다. 단행본의 경우 60퍼센트가 조금 못 되고, 석사·박사 논문의 경우 63퍼센트를 조금 넘으며, 학술논문의 경우 45퍼센트가 조금 안 되는 것들이 제4기에 간행되거나 발표되었다.⁶⁰

58 한배호, 「학문과 정치 현실: 갈등하며 공존하는 두 세계」, 『일본연구논총』 제11호, 1999, 21~24쪽.

59 김영작,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에서의 일본연구 동향: 정치 외교 분야를 중심으로 본 회고와 전망」, 『일본연구논총』 제11호, 1999, 39쪽.

60 김영작,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에서의 일본연구 동향」, 43쪽.

주제별로 보면, 제1기에는 한일 관계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제4기에는 일본의 정치 분야의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단행본의 경우는, 한일 관계 분야가 제1기에 70퍼센트에 조금 못 미치나, 제4기에는 14퍼센트보다 조금 적은 정도로 줄었고, 일본 정치 분야는 제1기에 26퍼센트에 조금 못 미쳤던 것이, 제4기에는 47퍼센트를 조금 넘는 정도로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학위 논문이나 학술 논문의 경우에도 뚜렷하다. 주제별로 본 두 번째 특징은 특히 일본의 정치 가운데서도 군사·안보 분야 연구의 증가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일본의 정치 분야 가운데 군사 안보 분야 외에도 점차 관심 영역이 다양화하고 있는 점이다.⁶¹

제1기는 학문 그 자체로서도 불모의 시기이자, 강렬한 반일 감정의 시기로, 객관적인 연구가 불가능한 시기였다. 제2기는 여전히 반일 감정이 강해, 그 영향 탓에 객관적으로 일본을 연구할 분위기는 아니었으나, 1960년대에 일본이나 미국에서 유학해, 지역연구로서의 일본 연구를 경험한 학자들이 귀국해, 일본 연구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시기다. 현대일본연구회의 발족과 『일본연구논총』의 창간이 이를 상징한다. 제3기에는, 해외에서 본격적으로 일본 연구로 학위를 받은 연구자들이 귀국해 주축을 이루었다. 게다가 대학이나 여타 연구기관에 일본 관련 연구소가 개설되어 일본 연구의 주체적 조건이 갖추어진 시기다.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 사회과학의 방법론에 입각하여 연구함으로써 사회의 터부에 도전했던 시기다. 이를 김영작은 국교정상화에 따라 일본이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분명히 인식되고, 국교정상화 이후의 경제 성장에 자신이 붙어, 심리적 여유를 갖고 과거의 감정을 극복할 수 있었던 측면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제4기에는, 제3기에 정립된 주관적, 객관적 조건이 성숙하여 연구의 증가 경향에 가속도가 붙었다. 게다가 냉전이 끝나 동북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경향 속에서,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상승하여 그 역할이 확대된 것과, 일본의 정치와 사회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 등을 배경으로, 일본 연구의

61 김영작,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에서의 일본연구 동향」, 47~48쪽.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이룩하기 시작했던 시기다. 또한 한일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한국에서 문민정부가 등장하고 일본에서는 자민당 장기정권이 붕괴하는 와중에, 한일 관계의 구조적 변용(變容)이 시작되려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 일본에서 등장했던 ‘보통국가’론은 한국에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제4기에 압도적인 연구 성과가 나오게 된 것은, 이런 사정이 배경이 되었다.⁶²

이러한 분석의 결과로 김영작은 21세기를 앞둔 한국의 일본연구 과제로 네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여전히 양적·질적 측면에서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치 연구는, 정치학의 여타 분야와 비교해서 여전히 미흡하다는 인식이 그 배경이 되었다. 둘째 과제로는 일본 연구의 종합화와 체계화를 들었다. 정치사에 관한 계통적 연구와, 쟁점 중심의 일본 연구를 종합함으로써, 일본 정치의 전체상을 도출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셋째 과제는 연구회와 학회의 활성화와 연구 재정지원 확보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과제는, 바람직한 한일 관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의 일본 연구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종래 일본 연구의 패러다임은 ‘네거티브 패러다임’과 ‘포지티브 패러다임’, 그리고 양자의 ‘혼합 패러다임’(일본 모델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점)의 세 가지가 있었으나, 이들 패러다임으로부터도 전환할 시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각,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동경이 갈등하고 공존하는, 일본을 향한 한국인의 심리상태를 반영하고 있는데, 열린 내셔널리즘과 지역으로서의 파트너십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산해내야 한다는 것이 요점이었다.⁶³

이상이 김영작의 문제의식이자, 21세기를 맞이하기 직전에 한국의 일본 연구자들이 갖고 있던 평균적 인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 설정 하에 처음으로 기획된 『일본연구논총』 제12호(2000년)

62 김영작,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에서의 일본연구 동향」, 50~63쪽.

63 김영작,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에서의 일본연구 동향」, 63~72쪽.

는 「21세기, 일본의 국회개혁」이라는 주제로 발간되었다. 2007년 11월에는 배성동이 현대일본학회의 회장이 되어 「전환기, 일본의 국가개혁」을 주제로 한 책의 출판을 기획했다. 이를 위해 세 번의 워크숍과 1999년 8월의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했는데, 『일본연구논총』 제12호는 이들 학회 행사에서 발표된 논문을 모은 것이었다. 소장연구자를 중심으로 한국 연구자 13명과 야마구치 지로(山口二郎), 후쿠이 하루히로(福井治広), 마부치 마사루(馬淵勝), 쓰지나카 유타카(辻中豊) 등이 집필자로 참가했다. 총론은 배성동과 윤정석이 쓰고, 결론은 김영작이 썼으나, 본론의 논문을 쓴 한국 측 집필자는 모두 3세대에 속하는 연구자들이었다.

4) 직업으로서의 일본연구, 이중의 과제를 의식하다

『일본연구논총』 제13호(2001년 여름, 회장은 이정복)부터는 체제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이전까지 『일본연구논총』은 2년에 1회씩 발간되고,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도 별도의 심사제도가 없었다. 그런데 제13호부터는 연 2회 발간과 심사제도가 도입되었다. 논문 발표 기회를 늘려보자는 요청(要請)과 학문적 수준을 좀 더 향상시킬 필요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함이었다. 체제 변화를 의도해서인지 표지와 속표지도 바뀌었다. 또한 집필자의 면면도 일변했다. 권두언을 쓴 이정복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3세대’ 연구자가 집필자였다. 6편의 논문과 1편의 서평이 수록되었는데, 7명의 집필자 중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 3명, 일본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 4명이었다. 내용은 전후 정치사, 현대정치 분석, 금융 개혁의 정치, 복지정책, 중일 관계 등에 관한 것이었다.

이정복은 현대일본학회의 세대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1세대는 식민지시기에 교육을 받은 원로회원들로, 일본을 학문적으로 전공하지 않은 세대였다. 제2세대는 일본어로 교육을 받지 않은 1940년대 출생자들로, 미국 대학에서 일본과 관련된 연구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거나, 일본에 유학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다. 그 다음으로는 1950~1960년대 출생자들로, 한국 국내나 일본, 미국의 대학에서 일본 연구로 학위를 받은 연구자들이다. 제1

세대와 제2세대가 반드시 일본 연구를 전문으로 하지 않은 반면, 제3세대는 명확히 일본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자들이다.⁶⁴ 제3세대가 되어서야 겨우 ‘직업으로서의 일본 연구’가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겠다. 제13호에는 논문 7편, 에세이 1편, 서평 1편이 실렸다.

『일본연구논총』 제15호(2002년 여름)에서는 한상일이 「현대일본연구회의 『일본연구』: 회고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글로 ‘현대일본학회의 일본 연구’를 총괄하고 있다. 한상일의 총괄과 회고에 따르면, 연구회의 결성은 당시 학회의 주류를 이루었던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대한 비판에 가세하기보다, 일본 그 자체의 이해와 일본의 정치·사회적 변동 규명을 통해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현실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연구회 멤버들의 구상 속에는, 일본에 대한 ‘지적(知的) 작업’과 ‘객관적 연구’라는 두 개의 목표가 포함되어 있었다.⁶⁵

또한 한상일은 초대 총무간사였던 만큼, 회원들의 면면에 대해서도 비교적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창간호에 수록된 회원 수는 26명이었는데, 당시의 연령으로 30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1명, 50대가 3명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30대가 약 절반으로, 매우 젊은 인적 구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분야별로는 정치학이 압도적으로 많아 21명이었고, 경제학 3명, 법학 1명, 사회학 1명 등의 구성이었다. 최종 학위 이수 국가별로는 한국 5명, 일본 7명, 미국 13명, 영국 1명으로, 그 중 일본을 주제로 하여 학위 논문을 쓴 회원은 9명이었다. 여기서 한상일은 네 가지의 특징을 찾아내고 있다. 하나는 30~40대 연구자, 즉 해방 10주년을 전후하여 태어난 연구자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미국 유학파가 많다는 점이다. 30~40대의 연구자가 유학했던 때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걸친 시기로, 미국에서는 지역연구가 학술적 사회과학의 한 분과 학문으로 확립되었던 시기다. 이들은 그 세례를 받은 연구자들이었다. 셋째로는, 해외에서 유

64 이정복, 「권두언」, 『일본연구논총』 제13호, 2001, 1~3쪽.

65 한상일, 「현대일본연구회의 『일본연구』: 회고와 전망」, 『일본연구논총』 제15호, 2002, 3쪽.

학한 연구자들이 많은 가운데 일본을 주제로 학위 논문을 쓴 연구자는 소수 파였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일본연구회에 모인 다수의 연구자들에게 일본 연구는 새로운 영역이었다. 네 번째의 특징으로 정치학 연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⁶⁶

1999년 시점에서 회원 수는 106명으로 늘고, 일본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자가 증가했다. 한상일은 연구자 수의 증가가 상징하듯,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일본 연구의 과제를 지적한다. 정치학에 치중된 연구를 시정하고, 우선 제 사회과학의 학술적 연구를 지향해야 하며, 역사와 사상에 대한 관심이 희박한 점을 반성하여, 사회과학과 역사·문학의 통합을 통해 국민 국가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한일 관계의 미래상을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일본 연구로서 획기적 의미를 가진 ‘일본근대사 연구’ 시리즈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한국 특유의 시각에서 일본을 분석하는 기획 연구를 수행하여 국제적 학계의 평가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새로운 세대에 게 숙제를 던지고 있다.⁶⁷

2003년 여름의 『일본연구논총』 제17호에 기재된 김영작의 「학회의 위상강화를 위한 제언」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김영작은 이 시기에 학회가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하고, 그 현상(現狀)에 대한 분석과 진단, 처방을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김영작은 일본 연구자가 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대학의 자리가 늘어난 것, 게다가 일본 연구를 지원하는 기금이 늘어 여러 가지 연구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일본 연구를 둘러싼 환경이 갖춰지고 인프라가 확장되었다는 의미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학회 활동을 저조하게 만드는 요인도 되었다고 지적하는데, 그 이유로는 학회 활동으로부터 학회 외부의 활동으로 중점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김영작은 이러한 상황에서 학회가 학회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고, 국가의 공적 평가와 지원

66 한상일, 「현대일본연구회의 『일본연구』: 회고와 전망」, 4~5쪽.

67 한상일, 「현대일본연구회의 『일본연구』: 회고와 전망」, 13~21쪽.

을 받는 체제 속에서 학회지의 질적 향상을 기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기한다.⁶⁸

5) 최근의 일본연구, ‘모델론’에서 ‘관계론’으로 추이하다

그 이후로, 전술한 것과 같이 『일본연구논총』은 전면적인 심사제도로 전환되어, 특집을 꾸미는 일이 없어졌다. 그 후 일본 연구자가 모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대학연구소 등의 프로젝트로 이행해 갔다. 그 대신 일본의 정치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한 논문이 나오게 되었다. 그 결과로 한국의 일본 연구자가 가지는 관심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일본연구논총』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한 것이다.

그 경향으로는 첫째, 국내정치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연구들이 생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2009년과 2010년에 정점을 찍은

<표 1> 2005~2014년 『일본연구논총』 게재 논문 분석(단위: 편 수)

논문주제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국내 정치	정치사·사상사	3	1	2	5	3	3	3	3	2	1
	국내정치	0	4	3	4	3	4	2	4	2	6
	경제정책	3	4	1	3	6	5	3	3	1	1
	사회문화정책	0	1	8	3	2	3	1	2	1	2
	행정·지방자치	2	4	2	0	3	1	0	1	0	0
	기타 정책	0	0	0	0	0	1	1	0	2	0
	합계	8	14	16	15	17	17	10	13	8	10
국제 정치	대외관계	10	8	11	10	8	5	4	2	6	6
	한일관계	7	7	2	4	1	1	13	1	4	6
	합계	17	15	13	14	9	6	17	3	10	12
기타		1	1	1	0	0	0	0	1	1	2
합계		26	30	30	29	26	23	27	17	19	24

68 김영작, 「학회의 위상강화를 위한 제언」, 『일본연구논총』 제17호, 2003, 2~8쪽.

뒤 조정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은 2012년을 예외로 하면 대체로 한일관계보다 일반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이 우세하며, 점점 줄어들다가 2011년 이후 부활 기조에 있다는 점이다. 셋째, 2011년은 한일관계에 대한 연구가 다른 분야의 연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산출되었다는 점이다. 이상의 경향에서 현대 일본연구의 다음과 같은 특징을 읽어낼 수 있다. 즉 미세하나마 연구자들의 관심의 초점이 ‘일본 국내정치’에서 ‘일본의 대외정책’ 또는 ‘국제정치 속에서의 일본’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11년에 한일관계 연구가 돌출적으로 증가하고, 2014년에도 다시 한일관계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2009년과 2012년의 일본에서의 정권교체를 반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부터 일본의 정치변동에 따라 일본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연구자들의 관심이 우선적으로 쏠리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 반응 이후에는 국내정치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에 대한 내재적 이해의 노력이 동등하게 시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도 한국의 현대 일본정치 연구가 ‘이중과제론’으로 제기되는 숙제를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위에서 지적했듯이 전반적으로는 국내정치에서 대외정책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덧붙여 지적할 수 있겠다. 즉, 한국의 현대 일본정치 연구는 ‘이중과제론’ 안에서도 ‘일본모델론’의 시각이 후퇴하면서, 일본을 국제정치의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관계론’의 시각에서 과제를 재설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5. 결론

이상으로, 정치학을 중심으로 한국의 일본 연구의 전개를 살펴보았다. 그것은 전근대나 식민지 지배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 연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을 극복해온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 불신의 씨앗은 김성일 일화에서 기원

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에 대한 ‘내재적’ 이해와 그에 입각한 ‘합리적’ 대응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으로 말미암아 ‘정세오관’을 유도한 원흉으로 낙인찍힘에 따라, 일본에 대한 어떠한 낙관론도 조선시대 이후 한반도에서는 쉽게 허락되지 않는 분위기가 마련되었다. 거꾸로 국익의 사적 연산을 생략한 ‘근본주의적’ 일본 비판은 일단은 무오류의 철칙으로 대접받게 되었다. 이러한 뒤틀림은 근대에 들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화 과정을 겪으면서 더욱 확고한 신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 연구는 언제나 일본 비판의 알리바이를 만들어 두어야 했고, 일본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적극적 평가를 의도하면 할수록 일본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은 일종의 ‘후미에’(踏絵, 사상검증을 위한 의례)와 같이 필수 전제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 일본이해’는 늘 ‘주체적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했고, 그런 의미에서 늘 ‘목적의식적’이어야 했다. 이러한 현실이 일본연구에 ‘이중과제’를 부과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이중과제’를 한국의 일본 정치연구가 스스로의 과제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는, 역설적이게도 ‘주체적 필요성’이 더 이상 필수 전제가 되지 않아도 되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마련되었다. 마침 그 시기에 한국에서는 ‘세계화’를 구호로 지역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했고, 일본 정치 연구가 양적 급성장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객관적 일본이해’는 ‘국제적 보편성의 확보’라는 새로운 과제로 털갈이를 하여 일본 연구의 주류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현대일본학회를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해 온 일군의 일본연구자들이 그 동안의 연구성과의 축적 위에서 이러한 변화에 즉응해 일본 연구의 질적 도약을 주도했다. 이후 한국의 일본 정치 연구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숙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점도 노정(露呈)되고 있다. 그것은 ‘국제적 보편성의 확보’라는 목표가 가지는 이중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 정치 연구가 국제적 맥락 속에서 일본의 위상을 파악하는 ‘관계론’적 관점에 서기 시작한 것과 동시에, 그러한 입장의 과도한 반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다시 ‘한일’ 관계라는 특수한 시점으로 돌아오는 손쉬운 통로가 되

고 있는 듯 보인다. 따라서 ‘국제적 보편성의 확보’라는 목적에서 보다 중요한 과제는 일본 정치 연구를 국제적 시좌에서 시도하여 연구의 ‘보편성’을 획득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일본 정치 연구가 힘써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가장 우선적으로 지역연구의 세계적 전개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지역에 대해 시선의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지역에 대한 시선이 제국의 지정학으로부터 강대국의 지역연구로 이동하고, 바야흐로 일상과 생활 세계에 대해 관심을 쏟는 새로운 연구 방법이 모색되고 있는 현상(現狀)을 감안해야 한다. 이런 현상은 지역연구의 중심이, 정책학으로부터 사회과학으로, 그리고 문학·사학·철학으로 이동해온 것과도 관련된다. 이 현상은 또한 달리 말해 지역연구가 적용의 학문으로부터 설명의 학문으로, 그리고 이해의 학문으로 변화해온 과정과도 관련이 있다.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가 등장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지역 연구에 대한 기대의 변화를 배경으로 한다. 바야흐로 한국의 일본 지역 연구는 트랜스내셔널한 지역 속에서 일본을 파악하고, 이를 초학제적(transdisciplinary)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일본 지역 연구는 또 다른 ‘이중과제’를 안고 있는 듯 보인다. 첫째는 한국의 일본 연구가 일본의 일본 연구와는 다른 또 하나의 중심을 세워, 일본 연구의 또 다른 발신국이 되는 것이다. 둘째는 한국의 일본 연구자 네트워크에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연구자의 네트워크를 중첩시키는 것이다. 그 목표는 조선의 선배들이 일본 연구를 통해 시도했던 세계인식을 21세기에 동아시아 수준에서 수행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일본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는 없다’와 ‘동아시아는 실체이다’라는 양 극단의 주장 사이에서 동요하며 공동(空洞)이 되어가고 있는 ‘동아시아’론에 내용을 채우는 것이 그것이다. 이때 정치학은 추상론으로 치우치려는 최신의 포스트모던한 지역연구를 정책론의 영역에 머물게 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방법으로서의 일본 정치’ 연구가 21세기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모델론’과 ‘관계론’을 동시

에 극복하며 일본연구의 ‘이중과제론’을 최종적으로 완수하는 길이 될 것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50년째에 맞이한 한일관계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출구가 여기에서 찾아질 수 있다.

*이 글은 일본어로 작성된 초고를 대폭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일본어 초고는 정지희(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이고 박사/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일본 근현대사, 미디어와 대중문화 연구)가 번역했다.

ILBI: Korean Journal of Japanese Studies. Vol 12, 2015

CONTENTS

4 **Editor's Note** NAM Ki Jeong

50TH ANNIVERSARY OF KOREA-JAPAN NORMALIZATION: EVOLUTION OF CONFLICT AND COOPERATION

- 26 A New Paradigm of Korea-Japan Relations for the Next Generation:
Reconciliation and Restorative Justice CHUN Ja Hyun
- 50 Early Stage of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NISHINO Junya
- 72 Legal Status and Social Position of Koreans in Japan:
After the 1991 Memorandum of the Japanese South Korean Agreement YOO Hyuck Soo
- 102 50 Years after the South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and
Delimitation of Maritime CHO Youn Soo
- 134 South Korea's Diplomacy and the Evolution of Korea-Japan
Security Relation PARK Young June
- 168 Historical Perception, Developmental Strategy, Policy Idea and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Competitive Dependence in Political Perspective YOON Dae Yeob
- 196 Cooperation and Conflict seen from the Rise and Fall of Bilateral
Political Network PARK Cheol Hee
- 224 Realizing and Overcoming the Double Mission:
A Short History of Japanese Studies in South Korea NAM Ki Jeong
- 264 Retrospect of Korean Students Studying in Japan after the 1945 Liberation KIM Young Jak
- 290 Understanding Japanese Local Politics through Gender Analysis SHIN Ki Young

RESEARCH NOTE

- 308 Power Shifts and Japanese Bureaucracy: Relationship between
Bureaucracy and Power Shift during the Two Power Shifts SHINDO Muneyuki

ARTICLES

- 328 Cross-Boundary, Cross-Lingual and Cross-National Writings of Yoko Tawada CHOI Yun Young

일본비평
ILBI

Korean Journal of Japanese Studies 2015 상반기, 제12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발행일 2015년 2월 15일 | **발행인 겸 편집인** 박철희 | **편집위원장** 박규태 | **편집간사** 이은경

편집위원 강대웅, 권숙인, 김봉진, 김효진, 남기정, 목수현, 박진우, 신기영, 양일모, 원지연, 유혁수, 윤상인, 이은경, 이지원, 이지형,
임성모, 장인성, 정진성, 조관자, 최영호, 황성빈

발행처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 **전화** 02) 880-8503 | **팩스** 02) 874-3689

제작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전화** 02) 880-5220

ISSN 2092-6863 Copyright © 2015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비평」에 실린 글은 일본연구소 홈페이지(ijs.snu.ac.kr) 및 디비피아(www.dbpia.co.kr) 등에서 보실 수 있으며 구입,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로 연락 바랍니다.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하며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일본비평」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행되고 있습니다(NRF-2008-362-B00006).

차례

4 편집자의 말

한일 국교정상화 50년: 갈등과 협력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남기정

특집: 한일 수교 50년 갈등과 협력의 진화

- | | | |
|-----|--|--------|
| 26 | 다음 세대를 위한 한일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화해, 그리고 회복적 정의 | 천자현 |
| 50 | 한일 경제 협력 관계의 시작과 제도화 과정 | 니시노 준야 |
| 72 |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및 사회적 위상: 1991년 합의각서 이후를 중심으로 | 유혁수 |
| 102 | 한일어업협정과 해양경계 확정 50년 | 조윤수 |
| 134 | 한국외교와 한일안보 관계의 변용, 1965~2015 | 박영준 |
| 168 | 역사인식, 발전전략, 정책이념과 한일 경제 관계:
경쟁적 의존 관계의 정치적 시각 | 윤대엽 |
| 196 | 정치네트워크의 부침으로 본 한일 협력과 갈등 | 박철희 |
| 224 | 한국의 일본 정치 연구사: '이중과제'의 인식과 극복의 여정 | 남기정 |
| 264 | 특별기고 해방 후 1세대 일본 유학생의 회고 | 김영작 |
| 290 | 특별서평 젠더 분석을 통한 일본의 지방정치 읽기 | 신기영 |

연구노트

- | | | |
|-----|--|---------|
| 308 | 정권 교체와 일본 관료제:
두 번의 정권 교체에서 나타나는 관료제와의 관계 | 신도 무네유키 |
|-----|--|---------|

연구논단

- | | | |
|-----|------------------------------|-----|
| 328 | 다와다 요코의 탈경계적, 탈민족적, 탈문화적 글쓰기 | 최윤영 |
|-----|------------------------------|-----|

356 참고문헌

366 국문초록

371 영문초록